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사용설명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늘어난 지원, 가벼워진 육아부담

아이를 좋아하지만 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김지혜 씨(35세)와 이민준 씨(38세) 부부는 최근 아이를 가지기로 결정한 후 다양한 정보를 찾다가 깜짝 놀랐다. 국가에서 임신, 출산 관련 지원해주는 정책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지혜 씨가 처음 임신했을 때 받은 첫 만남 꾸러미는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우리 아이 첫 유모차와 카시트 등 목돈이 들어가는 용품을 구매하는데 아주 요긴했다. 매월 받는 영아수당 역시 매일 사용하는 기저귀와 오감놀이 장난감 등 소소하게 드는 아이 용품을 마음 편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육아휴직 역시 기대 이상이었는데 첫 3개월은 지혜 씨가, 다음 3개월은 민준 씨가 사용해 6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을 받으며 아이와 함께 있을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또 회사에도 지원금이 지급되어 부담도 덜 수 있었다. 지혜 씨는 이후에도 9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며 최대 금액인 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프리랜서에게도 이 혜택이 주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며 불안함에 임신을 미루고 있던 동생 아영 씨에게도 변경된 제도를 알려주었다.

첫 만남 꾸러미('22~)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를 6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생 시 초기 양육비용으로 200만원(일시금) 추가 바우처 지급

영아수당

- '22년도 출생아부터 도입하여 지원 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 '25년 월 50만 지급

육아휴직 급여

- 자녀 만 0세(생후 12개월)이하 시기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 사용시 각자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 인상지원
-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 상한 월150만원으로 상향지급(현행 통상임금 50%, 12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 실질적 사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가 자녀 만 0세 이하 시기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3개월간 육아휴직지원금 월 200만원 지원(현행 30만원)

중소 · 중견기업 인건비 세액공제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간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육아휴직 권리 확대

-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포괄해 모든 취업자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25년)

김지혜, 이민준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첫 만남 꾸러미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6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출생시 바우처 200만원(일시금)
영아수당	•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구분 - 미이용시 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 - 이용시 부모보육료 47만원	• 0~1세 영아수당 신규 도입 – 어린이집 이용여부 상관없이 통합 (보육료·양육수당) – '22년도 출생아부터 단계적 도입,'25년 월 50만원 지급
영아기 자녀, 집중 시간지원 (보편적 육아휴직 사용문화 정착)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신설 도입 -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 지원(3개월) ※ 자녀 만 0세때 근로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원 지원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대체인력채용 80~12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 육아휴직지원금 200만원(3개월) 이후에는 30만원 지원 ※ 자녀 만 0세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세액공제 - 육아휴직 근로자 연간 인건비의 5~10%	• 중소 · 중견기업 육아휴직 세액공제 - 육아휴직 근로자 연간 인건비의 15~30%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 유지

프리랜서 김아영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 임금근로자에 한정	※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

누구나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는 삶

박신혜 씨(21세)는 교제중인 김민호 씨(24세)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민호 씨와 헤어진 후 어린 나이에 출산한 신혜 씨는 취업도 어렵고 미혼모로 사는 것도 막연해서 차일피일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신혜 씨가 출산한 태양병원에서는 이미 국가 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속히 출생신고를 하도록 국가기관에서 연락을 받았고, 신혜 씨는 뒤늦게나마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를 떳떳하게 키워보기로 결심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계발을 함께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던 신혜 씨는 출산 시 초기 양육비용으로 지급되는 200만원(일시금) 바우처(첫만남 꾸러미)와 영아수당 월50만원을 받게 되었고 시간제보육을 활용하여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베이커리 학원도 다니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혜 씨와 같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이 강화되고 주거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접하자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덜어지면서 한결 자신감이 생겼다.

출생통보제 도입

-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고, 국가기관은 통보된 자료와 출생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누락된 아동에 대한 신속한 출생신고 이행 조치

양육수당 도입 및 시간제보육 확대

- 0~1세대상 영아수당 도입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 병급,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만34세 이하까지 확대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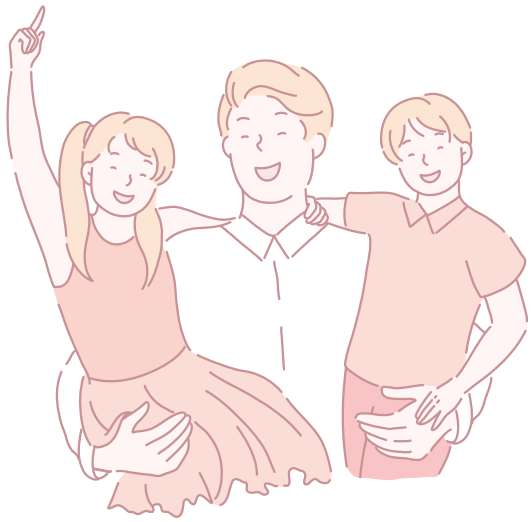
박신혜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출생통보제	• 출생신고 의무자 개인 신고 * 부 또는 모 등	•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 – 국가기관은 통보된 자료와 출생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빠짐없이 신속한 출생신고가 되도록 개선
첫 만남 꾸러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출생시 바우처 200만원(일시금)
영아수당	•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구분 - 미이용시 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 - 이용시 부모보육료 47만원	• 0~1세 영아수당 신규 도입 -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통합(보육료·양육수당) - '22년도 출생아부터 단계적 도입, '25년 월 50만원 지급
한부모가족 자녀 성장지원	•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만 24세 이하	•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 병급 •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

믿고 맡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울산에 사는 5살 보검이는 지난달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에 25개월 된 동생 소담이와 함께 다니고 있다. 원래 보검이는 사립 유치원에, 소담이는 민간 어린이집에 다녔지만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 덕에 동생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선생님 한 분이 담당하는 아동 수도 줄어서 유난히 예민한 소담이는 선생님의 좀 더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끔 엄마아빠 두분 모두 바쁘시거나 보검이나 소담이가 아픈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횟수도 늘었다.



보검이가 내년에 입학하게 될 초등학교는 취학기 아동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앉아서 쉬며 놀 수 있고 다락에서 책도 읽을 수 있도록 교실환경이 바뀌었고, 다양한 놀이·융합수업이 확대되면서 많은 체험과 활동이 가능해졌다.

정규수업 시간이 끝나면 돌봄교실에서 숙제도 하고 다양한 보드게임도 하면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돌봄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보검이 부모님은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공보육 어린이집

- 국공립 등 공보육 50% 확충 및 지역간 편차를 고려 공보육 25%미만 지역부터 확대 (울산 공보육 19.2% 전국 최저)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성제고

- 아동 발달 단계를 고려, 교사·아동간 긍정적 상호작용 강화를 위해 단계적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아이돌보미 보수.전문교육과 인.적성 검사 및 영아 양육가구 자부담 완화, 지원범위 확대 등 부모부담 완화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이 개선되고, 쉬는시간·점심시간 등 교육시간 확대의 단계적·자발적 논의 추진 및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활용, 온종일돌봄 지속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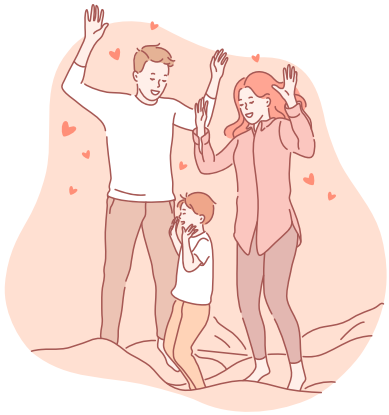
보겁이와 소담이 가족이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국공립 등 공보육 50% 확충	• 국공립 등 공보육 이용률 40% 확대	• 국공립 등 공보육 이용률 50%까지 지속 확충 ※ 지역별 편차를 고려, 25%미만 지역 우선 공급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 어린이집 만0세반 1:3, 만1세반 1:5, 만2세반 1:7, 만3세반 1:15, 만4세반이후 1:20 ※ 유치원 만3세이후 1:15~28 등 지역별 편차	•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여 서비스 질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영아종일제·시간제·질병감염 아동지원·기관연계 서비스 등	• 보수.전문교육, 인적성 검사 등 아이돌보미의 역량강화 및 영아 양육가구의 자부담 완화, 지원범위 확대 등 영아지원 강화
초등교육 혁신 및 온종일돌봄 지속 확대		• 예체능, 개별맞춤교육 등 교육과정 혁신 및 교실·학교 내 놀이공간 개선 학부모 희망에 따른 교육시간 확보
	• 온종일돌봄 - '22년까지 53만명 확대(학교 34만, 마을 19만)	•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 및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 지역 돌봄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신혼도, 다자녀 가구도 행복한 주거

강남에 살고 있는 고지영 씨(34세)는 작년에 결혼, 올해 말에 예쁜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그런데 전세로 들어갔던 신혼집이 너무 작아서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출산과 전세대란까지 고민이 많다.

이런 저런 사항들을 알아보던 중 지영 씨는 남양주별내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분양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결혼 7년 이내, 6세미만 아동양육가구가 추천대상인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게 되면,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아이돌봄시설 과 친환경마감재·통학차량 대기장소 등 특화설계가 도입된 전용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또 쌍둥이가 태어나 4인 가족이 되면, 기존에 살던 원룸과는 다르게 방 개수나 면적이 늘어나야 함에 따라 오랫동안 더 오래 살 수 있는 중형주택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지영 씨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운 좋게 분양에 당첨되었고 지영 씨는 구입자금 충당을 위해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상품을 통해 2.2억원을 연1.5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신혼희망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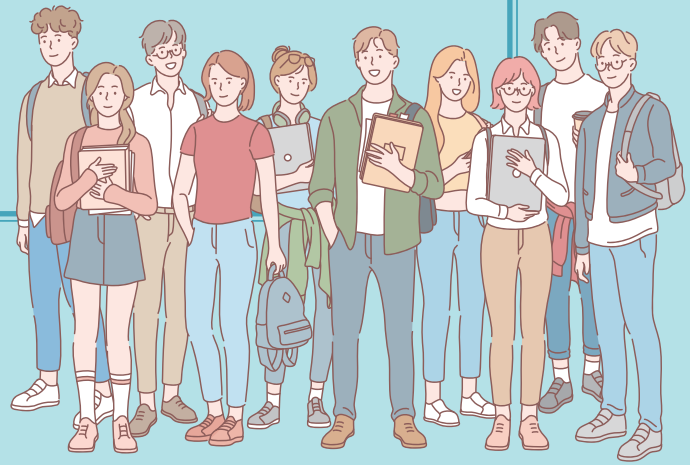
- (평형확대) 양육환경 개선 위해 4인가구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신규도입, 다자녀가구 등에 공급
  ※ ('21) 0.1만호→ ('23) 1.8만호 → ('25) 2만호
- (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30년으로 확장
  ※ (現)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 (改)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년
- (품질혁신) '25년까지 주요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

고지영 씨 가족이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신혼부부 맞춤형 특화건설 임대단지	• 신혼부부+만6세이하 자녀가구 •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 맞춤주택 등 공급	• 통합공공임대 공급 확대(총 35.4만가구) •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 친환경 마감재·통학차량 대기장소 등 육아특화설계 적용
다자녀가구 공공주택 분양	• 자녀있는 신혼부부 10년 거주	• 30년 거주 가능 • 4인가구 선호 중형주택 (전용 60~85㎡) 도입 • 다자녀 넓은 평형 이주 시 우선권 부여 (최초)
다자녀가구 대출한도 강화	• 대출한도: 2.4억원 • 대출금리: 2.0~2.6%(~'20.3)	• 대출한도: 2.6억원 • 대출금리: 1.85~2.4% ('20.3~)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평등한 일터에서
청년이 자랍니다!



맞춤형으로 꼼꼼하게 지원

대학 졸업을 앞둔 방예준 씨(24세)는 졸업에 앞서 학교에서 인생·진로를 설계하는 '한국형 갭이어'라는 진로탐색학점을 선택해 1년 동안 더 준비한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정규직으로 취업함에 따라 회사가 정부에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어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했다.

거기에 매달 12만 5천원의 적금을 들면 기업이 똑같은 돈을, 정부에서는 두 배를 더 넣어주어 2년 후 1,200만원의 만기인출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목돈을 만들기 시작했고 재무·금융 교육을 통해 미래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만들기 시작했다.

취업 후 회사 근처에 집을 알아보다가 마침 기숙사형 청년 주택을 만나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저렴한 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 회사 동료가 입주한 아파트형 행복주택을 보고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 5천만원의 보증금 역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듯해서 조만간 제대로 알아보고 옮길 계획이다.



'한국형 갭이어'

-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진로를 설계하는 기간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 활성화: 대학 진로탐색제

※ '20년 10교 / 4억 → '21년 20교 / 8억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규직 신규취업 청년(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이내),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2년형 만기 1200만원(청년300+기업300 (정부지원)+정부600)
- ('19) 9,971억원 → ('20) 1조2,820억원 → ('21안) 1조4,017억원

기숙사형 청년 주택

- 서울·지방주요대학 인근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0.8만호

행복주택

- 공적임대 27만실 공급 및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등 40만 가구 금융지원(~'22), 수급가구 자녀 주거급여 지원 확대('21~)

※ 공적 임대 35만호 공급, 신혼 희망타운 등 분양주택 20만호 공급, 신혼 전용 대출 40만 가구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2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청년금융지원 상품 지원확대로 '21년~'25년 간 청년 40만 가구 금융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및 보증료 인하율을 조정하여 지속 추진('21~)

방예준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진로탐색 기회강화		• 한국형 갭이어 도입 - 진로탐색학점제 등 1년동안 준비
청년 주거안정 강화	•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 일자리 연계형 및 노후청사 복합개발하는 청년행복주택, - 주요대학 인근 기숙사형 청년주택, - 역세권 리모델링 등 청년특화형 주택으로 세분화하여 공급 ('20.3~)
		• 공실오피스·상가 주거용도 전환융자 신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조건 개선	• 보증금 한도(85㎡ 기준): 7천 • 대출한도: 5천 • 금리: 1.8~2.4%	• 보증금 한도(85㎡ 기준): 1억 • 대출한도: 7천 • 금리: 1.5~2.1% ('20.하~)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재무·금융교육		• 금융위 등 재무·금융교육 실시

빠르고 강력해진 성차별·성희롱 피해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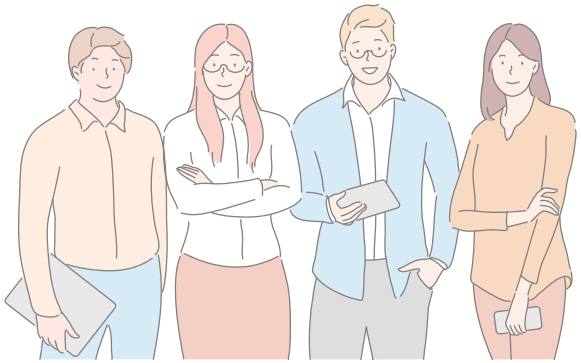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김현지 씨(36세)는 1년간 지속된 상사의 성희롱에 괴로워했다. 결국 상위 직급자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얼마 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장으로부터 상사와 함께 해고 통고를 받게 되었다.

현지 씨로는 너무 억울한 일이었지만 현행 성차별·성희롱 구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후에 차별시정 권고를 할 뿐 강제력은 없었다. 그리고 민형사 소송 역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사건 처리를 신청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접수 받을 경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고 불법 사항을 확인한다. 이후 사업주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희롱 관련한 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명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온전히 다 보상받기는 어렵겠지만 과거보다는 처리 과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현지 씨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금전적 손해 배상

-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 차별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명령

패스트트랙(Fast Track)

- 성희롱에 관한 구제 신청에 대해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하여 신속한 구제

※ 일반 신청사건에서 통상 소용되는 120일에서 최대 70일까지 단축추진

김현지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성희롱·성차별 구제절차 신설	• 국가인권위 • 지방노동관서 • 법원	• 국가인권위 • 지방노동관서 • 법원 • 노동위원회 - 접수→당사자 심문→시정명령(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성희롱·성차별 피해자 구제 강화	• 차별 등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명령제도 없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명백한 고의, 반복적 차별 시 피해액의 3배 이내 금전 보상
	• 노동위원회 사건접수 시 통상 120일 소요	• 성희롱 사건 신속처리(Fast Track) - 노동위원회 처리기간 단축(최대 70일)
	• 공공부문에 대한 인권위의 차별시정권고 시 이행강제력 없음	• 공공부문 사건 대응 강화 - 공공부문이 시정권고 불이행시 여가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고용상 성차별: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11조)

유연해진 근로시간으로 누리는 워라밸

커피 전문 프렌차이즈 기업에 근무하는 노소진 씨(37세)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해 내년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무와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지라,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고민에 빠져있었다.

그러던 중 회사 공지 메일을 통해 알게 된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덕분에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되었다. '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학업을 사유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소진 씨는 첫 1년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하루 1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학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제도도 있어 눈치 보는 부담 없이 단축 근무를 결심했다.

'22년부터는 수업 시간에 맞춰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 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다행히 회사에서 원격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덕에 오후 수업이 있는 날이면 오전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바로 등교하고, 필요시 굳이 출근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원격근무를 활용키로 했다.



2년 후 워라밸을 지원하는 유연한 제도와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소진 씨는 경력단절 없이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틈틈이 쌓은 실력을 발휘하여 승진까지 하게 되어 업무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최대 3년(학업은 1년)까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20.1)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사업장 및 공공기관
  - ('21.1)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 300 인 미만 사업장
  - ('22.1) 30인 미만 전 사업장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 중소기업 원격·재택근무 확산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간접노무비, 원격·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등 중소기업 업무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강화

노소진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그동안 임신 · 육아 사유로만 한정	•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임신, 육아에 더하여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확대 •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20.1)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1.1)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2.1) 30인 미만 전 사업장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사업주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4~40만원 - 간접노무비(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20만원
중소기업 원격.재택근무 확산	• 인프라 부족,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 등으로 원격·재택근무 활용 저조 * '20년 원격 재택근무 활용 비율: 17.4%(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원격·재택근무 정착 및 제도화 <원격근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 지원> -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지원: 기업당 연간 2천만원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 간접노무비 지원: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전국 주요거점 1,562개소 구축

경력단절 대신 경력 업그레이드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최민지 씨(36세)와 이수아 씨(35세)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친구 사이다.

민지 씨의 경우 이번에 둘째를 낳고 복귀를 했지만 출산으로 늦어진 승진, 보육에 대한 그냥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 갈등이 많다. 그리고 그런 민지 씨에게 친구인 수아 씨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소개해주었다.

수아 씨가 첫 아이를 낳고 상담을 받으며 도움을 얻었다는 말에 민지 씨는 새일센터에 연락을 해보기로 했다. 민지 씨에게 새일센터를 알려준 수아 씨는 이미 몇 년 전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 최근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던 중 자신에게 상담 등으로 도움을 주었던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을 온라인으로도 실시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아직 아이를 돌보느라 자유시간이 많지 않은 민지 씨에게는 희소식이었다.

특히 경력단절 전에 일하던 분야인 IT분야 직업훈련이 마련되어 있어서 교육 후 기업 새일여성인턴에 도전할 생각에 매일이 바쁘다.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확대

- '21년 경력단절 예방사업(전담인력 60명→89명) 확대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기업의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워크숍, 인사·노무 컨설팅 제공

온라인 교육

- 직업훈련 과정을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 방식 다양화

IT분야 직업 훈련

- 제약, 바이오, IT분야 등 유망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협회 등과 연계한 전문기술 훈련 확대

새일여성 인턴

-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여성 인턴 1,600명 확대
  ('20년 6,177명 → '21년 7,777명)
- '21년 새일여성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 80만원(신규) 지원

최민지, 이수아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경력단절 예방사업	• 경력단절 예방사업전담인력(60명)	• 경력단절 예방사업전담인력(89명)을 확대하여 재직여성 전문상담 및 기업문화 개선 컨설팅 등 확대 지원
직업훈련 분야	• 기존 제도 확대 운영	• 제약, 바이오, IT 분야 등 유망직종 및 전문기술 훈련 확대
직업훈련 방식	• 오프라인 위주	• 온라인 플러스 과정 운영 등 직업 훈련방식 다양화 * '21년 온라인직업훈련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신규 운영
인턴십 지원	• 인턴십 지원 6,177명	• 인턴십 지원 7,777명
	• 인턴지원금 ('20) 300만원	• 인턴지원금 ('21) 380만원(+80만원*) * 인턴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80만원) 지원

성차별없이 맘껏 능력을 펼치는 일터

최경희 씨(27세)는 두살 아이를 가진 엄마이다. 결혼 전에 IT업체에서 일했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공부와 일을 놓은 적이 없다. 보다 많은 현장 경험과 업무능력 증대를 위해 이직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IT분야는 여성인력이 소수다 보니 혹시 채용과정에서 차별은 있지 않을지, 채용되더라도 승진이나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고 있다

그러던 중 '성평등 경영 공표제' 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주요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성비, 임직원 중 여성비율, 성별 임금격차 등 직장을 구할때 중요한 정보를 미리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채용과정에 자녀 및 혼인 정보 수집하지 않도록 최근 집중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성차별 발생 시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경희 씨는 면접장에서도 채용단계별 금지사항 등 면접 전 면접위원과 구직자가 알아야 할 공정채용 안내문을 받을 수 있었고 채용 성차별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성평등 경영 공표제

-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채용-임직원-임금' 정보를 알기 쉽게 일괄 분석하여 공개하는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공정채용 안내문

- 면접과정에서 구직자는 성차별로부터 보호받고 면접 위원은 법적 공정채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익명 신고제도

- 성차별·성희롱 익명신고시스템(고용부 홈페이지) 운영

최경희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경영공시	• 현재 경영공시 항목 - 공공기관(채용, 임직원, 임금) - 지방공사·공단(채용, 임직원) - 지방출자·출연기관(임직원) - 상장법인(임직원, 임금) - 금융권(채용, 임직원)	성평등 경영 공표제	• 경영공시 항목 추가 - 지방공사·공단(임금) - 지방출자·출연기관(채용) - 상장법인(채용 자율공시 확대)
	• 각 기관별로 개별기업 현황을 각각 공시 * 알리오, 클린아이, DART, 은행 홈페이지 등		• 개별기업의 경영공시 정보를 분석하여 '채용-임직원-임금' 현황 종합 공표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 기존 제도 확대 운영	• 채용단계별 금지사항 및 처벌규정 등 안내문 배포 • 모집 채용에서의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및 성차별 익명 신고제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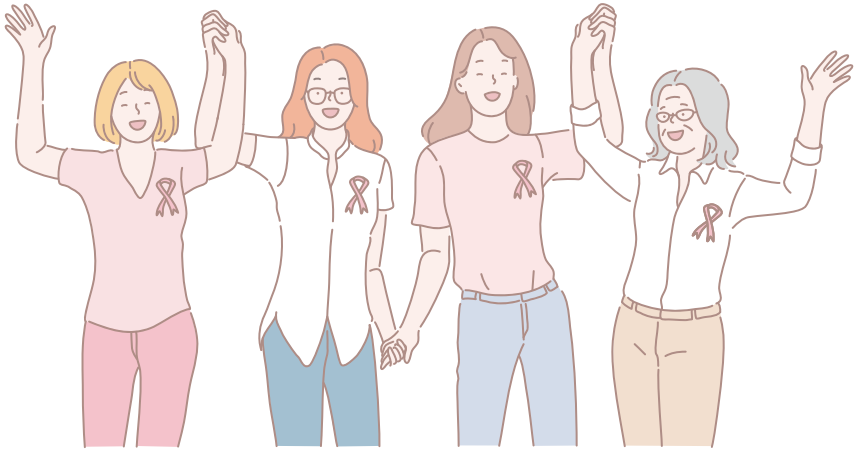
건강한 월경부터 성·재생산 권리 보장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허영지 씨(26세)는 그동안 생리통과 생리불순으로 남모를 괴로움을 겪어왔다. 매달 아프고 힘들어도 선뜻 월경 때문에 쉬겠다고 말하지 못해 간신히 버티곤 했는데 직장 인사팀에서 생리 휴가 사용 지침이 내려와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게 되었다.

생리대를 사용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는데 뉴스에서 생리대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이 높아 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후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담 기관을 이용하게 되면서 월경은 숨기고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중요한 건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3개월 후 임신계획이 있는 상황이라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월경에서 임신·출산까지 종합상담 서비스를 찾을 수 있었고, 임신 전 건강위험 요인 조기 검진까지 받을 수 있어서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생리 휴가

- 월경건강 지원을 통해 월경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보장이 필요한 건강으로 인식 제고 및 생리 휴가 사용 등 활용 보장

생리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생리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신설, 품질점검 등 안전성 제고

종합상담서비스

-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 월경, 피임, 생식질환, 임신의 유지·종결 등에 관한 생식건강, 임신·출산·양육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유해물질 안전

- 임신부터 출생, 청소년기까지 환경유해물질과 건강간의 인과관계 연구를 통해 성장단계별 건강보호 방안 마련

건강위험 요인 조기 검진

- 금연, 비만, 모자보건 등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설문-검진-교육-전문기관 연계제공

허영지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월경 건강 지원	•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생리 휴가	• 근로기준법 상 보장된 생리휴가를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생리 휴가 활용 보장
월경용품 안전	• 관리기준 부재	• 생리대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신설
종합 건강 상담서비스	• 임신, 출산, 양육 상담 및 정보 제공	•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전 생애 월경, 피임, 생식건강에서 임신·출산·양육까지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청년기 건강지원	• 건강 위험 관리 부재	• 건강위험 요인(금연, 비만, 모자보건 등) 조기 검진 도입
유해물질 안전	• 어린이 활동 공간과 용품에 환경유해물질 조사, 시설 개선	• 어린이 활동 공간 및 용품의 환경유해물질 조사, 시설 개선 환경유해물질 영향 연구 및 성장단계별 건강보호 방안 마련

지역에서 든든하게 자리잡는 청년

문예창작과를 졸업 후에 서울 소재 출판사에서 5년간 편집자로 근무하면서 바쁜 일상에 지친 황기쁨 씨(29세)는 규모에 상관없이 경력만 살려 취업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고향인 구미로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구미나 인근 지자체에는 기쁨 씨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출판사가 없어, 고달픈 서울살이를 버티며 결혼하면 퇴사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 정보를 알아보던 중에 '서울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확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를 통해 고향 소재 사회적기업(결혼이주·경력단절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을 위한 공연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기획·매니저·편집자 등 다양한 업무를 하며, 고향의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녀의 후배 박도경 씨(23세)는 재학중인 대학교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으로 선정되면서 대학에서 사회적 경제 기초 및 응용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유관기관 및 중간 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하는 중이다. 이후 경험을 살려 지역에서의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확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확대
  ('21년) 2,350억원, 2.7만명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확대 (22년까지 20개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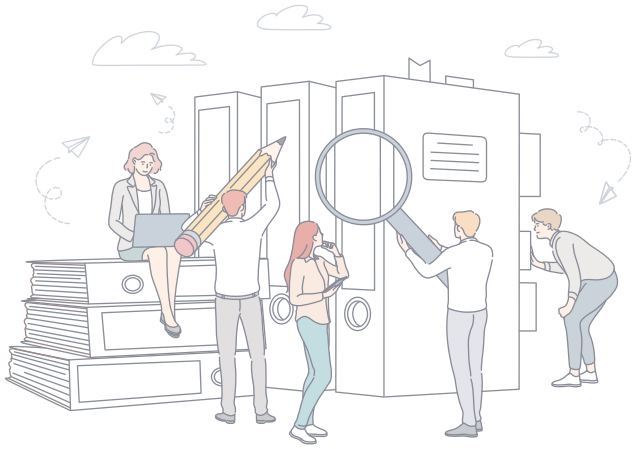
황기쁨, 박도경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지역사회활동 참여 확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년) 2,210억원, 2.6만명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21년) 2,350억원, 2.7만명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지역대학 역할 강화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17개('20년)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확대 20개(~'22년)**

밀착형 지원으로 살아나는 지역

충북 증평군은 1읍·1면의 전국 최소 행정구역으로 인구(37,300여 명)의 90% 이상이 읍 중심지에 집중된 압축도시로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이다.

그간 생활SOC는 이용 수요가 많거나 수익성이 확보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됐으며, 인구가 적거나 감소하는 지역은 생활SOC를 공급하더라도 운영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그래서, 지역 유형별 분류(농촌 중심지)를 통해 지역 중심에 다기능의 복합시설을 공급함으로써 공급·운영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정책의 하나로 증평군립도서관을 건립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가 조화된 증평군립도서관은 도서관·문화센터·전시관·영화관·천문대(옥상 카페)·인형박물관 등의 기능이 복합화 된 시설로, 郡 지역과 맞닿아 있는 진전·음성·괴산지역 주민들도 차량으로 30분 내 접근도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 간 시설의 공동이용과 원격지 이동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생활SOC 사각지역 문제를 해결했다.



생활SOC 사각지역 문제를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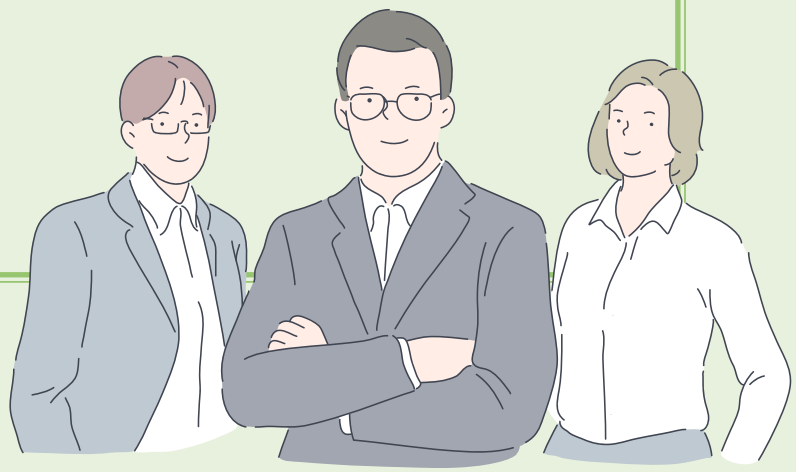
- 지역유형별 시설 종류. 규모 결정. 적합 운영계획 수립 등 지역별 차별화된 생활 SOC공급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 칸막이식 공급 체계로 공공 시설에 대한 지역 수요에 부응 곤란	• **지역유형별 시설 종류·규모 결정, 적합 운영계획 수립 등 지역별 차별화된 생활SOC 공급**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신중년의 삶을 붐업
(BOOM UP)합니다!



신중년, 생애전환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다

한 직장에서 평생을 근무해 온 송해 씨(55세)는 다니고 있는 기업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자 선배들의 사례, 그리고 후배들에 대한 고려, 조기퇴직 수당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 등을 생각해 정년보다 빠른 은퇴를 결심했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미리 퇴직 후 삶을 계획했는데 특히 경력 위치를 점검하고 강점영역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생애경력설계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었다.

퇴직 후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300만원 상당의 직업훈련을 지원받았고,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에 참여하여 5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

직업훈련을 이수 후 디지털 관련 직무에 지원한 송해 씨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P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 1,000인 이상 기업의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진로상담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20.5~)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길어진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내일배움카드

- 모든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제공하여, 직업훈련 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참여시 50만원 (K-Digital credit) 추가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최대 1년 근로자 1인당 월별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 지원
- 디지털, 그린관련 직무 신규 발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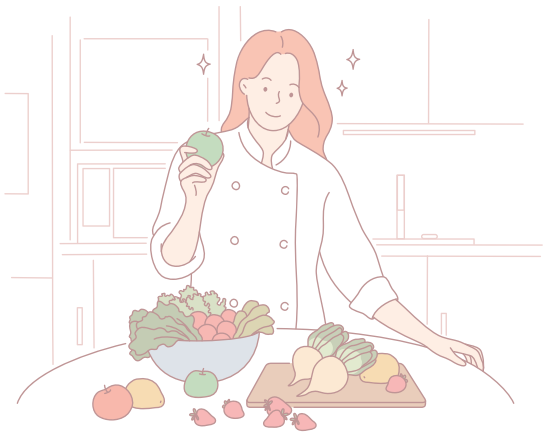
송해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재취업 지원	• 재취업을 개인 스스로 준비	• 1,000인 이상 기업의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20.5~)
	• 인생 후반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력설계 서비스 미흡	• 사회 초년생부터 미리 경력을 진단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재직자·구직자 모두에게 생애경력서비스 제공
국민내일배움카드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100% 지원	• 대상 확대(특고, 영세자영업자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50만원 추가 지급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기업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	• 디지털, 그린 관련 직무 신규 발굴 확대

길어진 노후 대비, 지금이라도 시작하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홍혜연 씨(48세)는 창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데다 코로나 19등의 여파로 폐업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지만, 당장 생계비 부담으로 인해 납부를 중단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한 혜연 씨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를 받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납부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직원이 추천해 준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음식점 폐업 후, 혜연 씨는 '중장년 희망 일자리 센터'에 방문하여 고용서비스를 지원받았고, 중소기업 재취업에 성공하였다. 이후 좀 더 노후를 탄탄하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혜연 씨는 바뀐 제도로 재취업한 중소기업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했다. 그리고 미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액을 따져본 후 더 이상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게 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제도로 본인 신고소득(최대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 50%를 지원

노후준비서비스

- 국민연금공단에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노후준비를 20,30대부터 스스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생애전환기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 중장년 전직지원 전문기관으로 재정비하여 패키지형 고용서비스 강화

바뀐 제도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라,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홍혜연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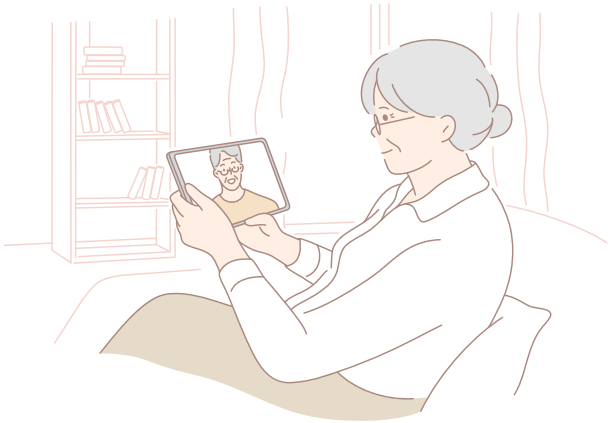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저소득 근로자(사업장가입자), 농어민 대상 보험료 지원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신고소득(최대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 50% 지원
생애전환기 노후준비 서비스 강화	• 은퇴기에 접어든 50, 60대 위주	• 20,30대부터 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신중년 고용서비스 강화	• 생애경력개발 서비스 제공 중심	• 중장년 취업 지원 중심으로 전직 지원 전문기관으로 재정비하고 부처별로 추진 중인 정부지원 사업정보 종합 안내 등 신중년 대상 고용서비스 강화
퇴직연금 가입 확대	• 대기업 위주 도입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법 개정 추진)

배우고 익히니 즐겁다! 새로운 도전

전업주부로 살아온 고소영 씨(65세)는 자녀들이 출가하고 배우자와 사별 후, 외로움을 크게 느꼈다. 평소 주변인들의 고민 상담을 잘 해왔던 소영 씨는 자녀들의 추천으로 '평생교육바우처'를 이용하여 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기로 했다.

이후 소영 씨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지원,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사'로 일하며 월 최대 75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거기에 매달 25만원을 받던 기초연금액도 인상되어 '21년부터 30만원을 지급받게 되어 손자녀에게 용돈이라도 마음 편하게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평소 KTX로 자녀 집에 방문할 때마다 휴대폰 예매가 서툴러 고생을 했었는데 동네 도서관의 '디지털 배움터'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은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식당의 키오스크 주문이나 인터넷 활용을 통한 다양한 모바일 라이프에 익숙해진 소영 씨는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외된 노인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일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삶의 보람과 활력을 찾은 것은 물론이다.



평생교육바우처

- 저소득층 성인학습자가 더 많은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당 지원액 확대
  (최대 35만원 → 기본 35만원, 최대 7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

기초연금 인상

- '20년 소득하위 40%에서 '21년 전체수급자 40~70%로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

디지털 배움터

- 행정 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같은 생활SOC의 공간을 활용하여 연간 1,000개소의 '디지털 배움터' 운영, 디지털 역량 교육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느낄 때 언제든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 전문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서 전문분야의 매칭 지원

고소영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노인일자리 개선	• '공익활동형' 일자리 비중 높음	• 전문특성을 살리고 존엄성이 유지되는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
기초연금 인상 대상 확대	• 소득 하위 40%까지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 최대 25만원 지급	• 소득 하위 40~70% 최대 30만원 지급
평생교육 바우처	• 최대 35만원	• 기본 35만원, 최대 70만원
디지털 역량 강화		• 디지털배움터 -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 및 지원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 자원봉사 포털사이트를 보완하여 전문분야의 맞춤형 매칭 서비스 지원

함께 잘사는 사회안전망 강화

김선호 씨(45세)는 건강이 악화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일을 나가지 못한지 6개월이 넘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벌기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 훈련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새로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 촉진수당(50만원, 6개월)을 지급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등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과 의욕이 생겼다.

선호 씨의 어머니 이행자 씨(82세)는 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신청하였지만 탈락했다. 그러나 이번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를 걱정하던 선호 씨는 한시름 걱정을 놓게 되고 직업 훈련에 좀 더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속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직업 훈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21년 40만명)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50만원x6개월

생계급여

- 노인가구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김선호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 시 안전망 부재	•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직업 훈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부양의무자 있을 시 생계가 어려워도 생계급여 지급 받지 못함	• 노인가구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예방하고 관리하는 노년 건강

원주에 사는 이건이 씨는 고혈압·당뇨병 등 복합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통해 만성질환자임에도 적절한 관리를 받고 있지 않은 고위험자(과소 또는 과대 의료·약물이용자 등)로 분류되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였다. 만성질환 환자로 등록되면 케어플랜이 수립되고 동네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환자 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 등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건이 씨는 동네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기로 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인센티브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스스로의 건강노력을 통해 각종 건강지표가 좋아지면, 건강포인트를 주는 것이다.



이후 건이 씨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혈압이 호전되고, 체중도 감소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건강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었다.

이처럼 스스로의 건강실천 노력을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건강인센티브제

- 대상 -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노력 - 건강프로그램 이수, 걸음 수 등 스스로의 노력과 건강지표 개선으로 평가
- 인센티브 - 연간 일정액의 건강보험 건강포인트를 지급

이건이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사전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		• 건강인센티브제 - 건강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에 따라 연간 일정액 포인트의 건강포인트 지급
		• 만성질환 관리 강화 -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 고위험자 발굴 - 동네의원·보건소·지역 보건의료단체 등 연계하여 만성질환 관리 지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이제 고령사회가
더 활기차고
건강해집니다!



돌봄 걱정 No! 빈틈없는 고령자 돌봄서비스

79세 김꽃님 할머니는 집 문턱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정형외과에 입원하게 되었다. 퇴원 후 바로 집에 돌아가고 싶었으나, 한동안은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할아버지(80세)가 집에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식사 준비나 간병을 감당하기 어렵고, 자녀 중에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 입원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병원 '지역연계실'을 알게 되어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퇴원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지역연계실에서는 읍면동의 케어안내창구와 연결해 주어 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신청까지 도움 받을 수 있었다.

퇴원 계획에 따라 근처 재활 전문병원으로 옮긴 할머니는 집중 재활 치료를 받았다. 이와 동시에 주거급여에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아 살던 집의 문턱 제거 등 집수리 할 수 있었다.



필요한 치료를 마친 할머니는 퇴원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안전한 집에서 요양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병원에 '지역연계실' 설치 유도(수가 적용 검토)

-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환자 지원팀이 퇴원계획 수립-지역사회 연계-사후관리 등 퇴원서비스 지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전국적 확산 추진(~'25)

- 기초적인 욕구 조사, 서비스 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신청(민원) 접수 · 대행 등 지원

회복기 집중 재활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

- 26개 지정('20.3) → 향후 100개~150개 확충 예정('26)

주택개조 지원

- 주택 상태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수선 유지 급여 지원(457~1,241만원)

김꽃님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 건강 상태와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을 안내·연계해 줄 '중간자(코디네이터)'가 없음	• 수요자 중심 서비스 - 전국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 신설 - 기초적인 욕구 조사, 서비스 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이행 등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지원 - '25년까지 전국적 확산 추진
		• 퇴원서비스 - 병원에 '지역연계실' 설치 유도 - 입원 초기부터 환자 지원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퇴원계획 수립-지역사회연계-사후관리 등 퇴원 서비스 지원 (수가적용 검토)
	• 재활의료기관 26개 지정('20.3월 기준)	• 재활서비스 -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 - ('26) 100~150개 확충 예정

한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혼자 사는 85세 박대복 어르신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4등급)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주 5회 이용하여 가사 도움 위주의 돌봄을 받고 있다. 사별 후 우울증이 찾아오고 고혈압·신기능 장애 등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있으나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잘 챙겨 드시지 않는다.

아들이 답답한 마음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를 찾아갔고, 곧 보건소, 지역 보건의료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이 참여한 지역케어회의가 개최되었다.

아들과 전문상담사가 어르신을 설득하였고 지역 방문 의료 실시의료기관에서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시작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에서 가사지원에 더하여 건강관리까지 해주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안내 받고 신청하게 되었다.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약 복용의 중요성과 함께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도 해주었다. 간호사의 지도를 통해 요양보호사도 영양 섭취나 약 복용에 신경 쓰며 돌봄을 제공해 주었다.

간호사는 매주 1번씩 와서 지속적으로 상태를 점검 해 주었고 어르신은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시게 되었다. 복지용구 지원으로 보행기를 구입하신 뒤 운동도 곧잘 나가신다. 집에는 사물 인터넷(IoT) 안전센서를 설치하여 이상이 감지되면 생활관리사가 즉시 방문·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가족들은 홀로 사시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짐을 한결 덜게 되었다.



시군구 지역케어회의

- 읍면동 접수 사례 중 복합적 케어욕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욕구 사정과 심층적 사례관리 실시

방문형 보건의료

- 거동불편 노인 대상의 방문형 진료, 간호 등 서비스 제공

통합재가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통합 팀'이 주야간보호·방문요양·간호·목욕 등 '통합서비스' 제공 ('19.8월부터 예비사업 실시 중)

복지용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 구입 또는 대여 지원

비대면 안심 서비스

- 센서 등 수집된 고령자 생활정보를 통해 이상 감지 및 응급상황에 대응

박대복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방문형 보건의료 활성화	• 입원 또는 외래로만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 거동불편 노인 대상 방문형 진료, 간호 등 서비스 제공 * 왕진시범사업 실시 중('19.12~)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 서비스 분절 및 연계의 한계로, 고령자의 의료 - 돌봄에 대한 복합적 욕구 대응에 한계	• 통합적 돌봄 제공 - 시군구 지역케어회의 - 복합적 케어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욕구 사정 및 심층적 사례관리 실시 * 25년까지 전국적 확산 추진
재가중심 장기요양보험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제공기관을 따로따로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음	• 통합재가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통합 팀'이 주야간보호·방문요양·간호·목욕 등 '통합서비스' 제공
		• 복지용구 - 노인 독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품목 확대를 위해 품목선정제도 개선 및 예비급여제도 도입 검토
비대면 안심서비스	• 기존 안부 확인 서비스는 응급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청각장애인 경우 전화 확인이 어렵거나, 방문 확인을 꺼리는 경우가 있음	• 비대면 안심 서비스 - 일정시간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온도·습도·조도 등에 이상이 감지한 경우 생활관리사 거주지 방문·확인 등 즉시 조치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 완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조강이 씨(47세)는 최근 혼자 사시는 70대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빠듯한 살림에 바쁘게 사느라, 어머니를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상태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몇 년 전 친한 직장 동료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요양 시설에 모신 후 마음고생 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이전과는 달리 초기 치매환자와 치매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초기 치매환자에게 상담-치매환자쉼터-가족교실-사례회의로 이루어진 단기 집중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 우선,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아 어머니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정확히 진단받았다. 그리고 가족교실에 열심히 참여해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단계별 증상에 따른 돌봄 방법과 응대요령을 배우고, 센터의 사례관리사들과 앞으로의 돌봄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치매 진단으로 겪은 혼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앞으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치매가족휴가제를 확대(연간 6일 → 12일)하고, 치매치료 관리비도 지원받고 치매가족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수가도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막막했지만,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해 집에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 졌다.

치매검사비 지원

- 중위소득 120%이하인 노인 대상 치매환자 감별 검사비 지원, 현재 11만원 → 15만원으로 인상

치매가족휴가제

- 치매환자 가족이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서비스나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 연간이용일수를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20년 연간 6일 → '22년 연간 9일 → '25년 연간 12일

치매치료 관리비

- 월 3만원 한도 약제비 지원 (연령기준 폐지, 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조강이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강화	• 치매안심센터의 상황 및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 서비스 제공	• 치매 조기발견 지원 및 초기 치매환자 집중 관리 - 치매 검사비 및 약제비 지원 확대 - 경증 치매환자도 상담, 치매환자 쉼터, 가족돌봄교실 등 연관된 서비스를 초기에 통합적·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 치매안심센터 이용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알기, 돌보는 지혜 등 교육 실시	• 치매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 -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제공 • 단계별 증상에 따른 치매환자 돌봄교육 • 치매노인의 인권과 학대 예방교육 • 상황별 구체적 응대요령 등
치매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치매검진을 꺼리는 경우가 있음	•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를 건보공단에서 치매안심센터로 제공해준 이후로, 지역 내 치매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신속하게 파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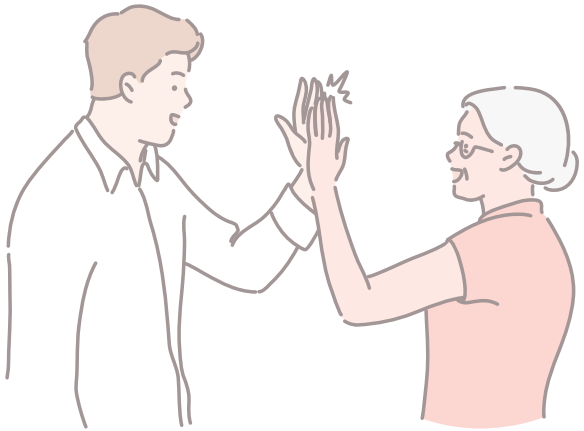
맞춤형 주택에서 편안한 노년을!

74세 이영자 어르신은 요즘 신바람이 난다. 그간 살던 30만 원짜리 월세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옮겨 오게 되었는데 월세 부담이 4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입주 자격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준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입주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단순히 월세 부담만 줄어든 것이 아니다. 물리치료실, 공동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어 편리하고, 단지 내 복지관에서는 식사와 문화 교실을 즐길 수 있다.

상주하고 있는 케어매니저들이 친절하게 안부를 물어주고 상담도 해준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가는 것이 큰 부담이었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외출동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방문 요양서비스 등도 지원한다고 하니 자녀가 함께 사는 것처럼 안심이 된다.

때마침 고령자 복지주택에 돌봄 로봇이 시범 보급되었는데 정서·인지·생활·건강관리를 돕는 로봇은 아침이면 활기찬 인사를 건네고 식사 시간, 기상 시간, 약 복용 시간도 알려주며 삶의 편리를 도와주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

- 노인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거와 돌봄이 함께하는 맞춤형 주택

* (대상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1인, 132만원) → 70%(1인, 185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전지원·사회참여 생활교육·일상생활 등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자립생활을 위한 고령친화기술(AgeTech)

- 첨단기기(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고령자 경험·감성 정보를 적용하여 소외감 등을 완화시키는 정서적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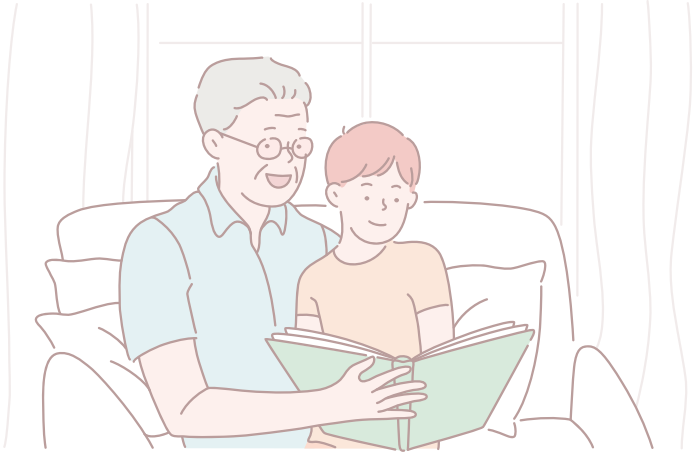
이영자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고령친화적 주택공급 확대	•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자 - 기존 영구임대 수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인, 132만원)	•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자 - 국민임대 수준으로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185만원)
고령친화 기술 개발	• 주로 의료 기술 및 노화 연구, 용품 및 식품 중심 연구개발 추진	• 로봇, AI, IoT 등 기술을 적용 스마트 돌봄, 고령자의 자립생활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제품·서비스 활성화

내 집으로 즐기는 편안한 노후

고동수 씨(76세)는 20년 전 구입한 주택이 꾸준히 올라 현재 시가가 9억 원이 조금 넘은 상태이다. 자녀 출가 후 2층 빈 공간에 전세를 내주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막상 쓸 돈은 부족했다. 몇 년 전 배우자가 사망하고 혼자 살고 있으나, 자녀와의 상속문제, 본인의 건강문제 등 더 나이가 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최근 바뀐 정책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임대료 수입도 추가로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치매에 대비하여 후견지원신탁을 설정하여 자신의 계획에 따라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연금 활성화

- 시가 9억원 이하 → 공시지가 9억원 이하 변경, 전세 준 다가구·단독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가능, 신탁방식 주택연금(주택소유자 사망 시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가 연금 자동승계하고, 유휴공간을 활용) 제도 도입 등

후견지원신탁

-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의 비용을 처리해주는 신탁

고동수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주택연금 제도 개선	• 시가 9억원	• 공시지가 9억원 • 전세 준 다가구·단독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가능 •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 도입
후견지원신탁 기반 구축	•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자산 보호 방안 미흡	• 추후 치매에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설정하고 생활비 인출, 증여와 상속 등 다양한 니즈에 적합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미리 준비하여 생애말기의 삶을 품위있고 존엄하게!

지방에 살고 있는 김금옥 씨(72세)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 주변 지인들을 따라 상조회에 가입하고 수의는 준비했지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유산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깊다. 의미 있고 실질적인 생애말기 준비를 알아보던 중 마침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웰다잉 교육'이 개설되었다고 해서 신청했다.

'자필 유언장'과 사후 요구사항을 담은 '사전장례의향서'을 써보고, '엔딩노트'를 작성하면서 다시금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었다. 교육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도 들었다. 훗날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이 겪을 고통을 덜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은 갔지만, 멀리 큰 병원까지 찾아가 작성하기는 버거워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상담사가 직접 근처로 방문해 안내해 주는 '찾아가는 상담소'가 시행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조만간 작성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또 다른 친구의 가족은 말기암이었는데 확대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통해 존엄하게 생애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도 관심이 생겼다.

예전과 달리 앞으로는 말기암이 아닌 다른 병이어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등 서비스가 더 다양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한다. 만에 하나 내 생애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낯선 병원이 아닌 내가 살던 집에서 고통 없이 준비할 수 있다니 두려움이 덜어졌다.

생명존중 죽음교육(웰다잉 교육)

-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질적인 생애말기 준비·설계를 연계한 평생교육의 실시 모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찾아가는 상담소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찾아가는 상담소는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인프라 취약지를 상담사가 방문해 안내·작성하는 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확대 및 질 향상

- 기존 4개 질환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을 WHO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 확대. 지역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공공호스피스 제공기관 확대 추진 등

김금옥 씨가 받게 되는 혜택 전후 비교!

	현재 (As-Is)	향후 개편 (To-Be)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 호스피스 서비스 4개 질환 한정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 단계적 확대 * WHO 권고 및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WHO: 악성종양, 심혈관질환(급사제외), 만성호흡부전 등 13개 질환 권고)
	• 호스피스 서비스 지역별로 제공기관 및 이용률 편차 발생	• 공공 호스피스 제공기관 확대
	•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인프라 부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관련 인프라 확대·개선 • '찾아가는 상담소'운영 활성화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 유언장 작성, 죽음준비교육 등 미흡	•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회문화 확산 - 사전장례의향서, 자필 유언장 작성 - 성년후견제도 연계 - 생애주기별 관련 교육 등
	• 웰다잉 정책 체계 미흡	• 생애말기 돌봄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 웰다잉 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 관련 입법 추진 등